

스웨덴 국민의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태도*

양재진** · 남윤민***

본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국민들의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보다 크게 많았다. 기본소득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대가 더 커졌다. 기본소득 증세의 경우, 기업과 부자를 통해 이루는 것을 선호하였다. 세금 인상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증세가 되더라도 자신의 부담은 피하고자 하는 노프(NOOMP) 현상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낮았지만, 그 정도는 이념성향과 세부담 인식, 그리고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해 보수나 중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지적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세부담 인식이 클수록,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크게 높아졌다.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높아졌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적 욕구(needs)에 무관하게 현금을 지급한다. 사회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0K2A9A2A1200023612)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주저자)

***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신저자)

복지적 효과 측면에서 매우 재정비효율적이다. 기본소득이 스웨덴을 포함해 대부분의 많은 복지국가에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게다가 스웨덴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수준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 이미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소요가 큰 기본소득의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스웨덴, 기본소득, 증세, 사회보장, 복지국가

1. 서론

스웨덴은 명실공히 대표적인 복지국가이다. 공공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05%로 OECD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다. 빈곤율과 소득불평등(가처분소득 기준)은 OECD평균보다 한참 낮고, 출산율이나 행복도는 OECD평균을 훨씬 웃돈다.¹⁾ 무엇보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온 나라다. 1930년대 보편주의적인 기초연금을 앞장서 도입하고, 1940년대 인구감소에 대비해 공보육을 위시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했다. 1950년대에는 실업급여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역량을 키워 재취업을 돕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1990년대에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의 연금제도를 창안해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을 대체하고 기초연금도 기초보장연금으로 개혁해 고령화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선보인 국가이기도 하다.

1) 스웨덴 빈곤율(전체인구 대비 %)은 8.9%로 OECD 평균 11.7%에 비해 낮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계수는 0.282로 OECD 평균 0.315를 크게 하회한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75로 OECD 평균 1.63을 웃돈다. 스웨덴의 행복도(Life Satisfaction, 10점 척도)는 7.3으로 OECD 평균 6.7보다 높다(2018년 기준, 행복도는 2020년 기준/출처: OECD Statistics. OECD Better Life Index).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자리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부쩍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라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사라진 미래 사회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Elon Musk)나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의 창업자들이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앤드류 양(Andrew Yang)이나 2022년 한국 대선에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장기실업자에 한정되기는 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업급여에 대신에 지급하는 실험을 벌이기도 했다. 이외 지방정부 수준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선진국은 물론 케냐, 나미비아,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Samuel, 2020; Karakas, 2016).

그런데 스웨덴만은 잠보니(Zamboni, 2021: 343)이 지적하듯이, “전국민 완전 기본소득이든 부분 기본소득이든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는 스웨덴에서는 거의 실증 상태라고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의 부의 소득세 방식의 기본소득이 소개되고, 프랑스에서 생태주의와 신좌파 운동을 일으켰던 앙드레 고르(André Gorz)의 기본소득 주장이 스웨덴에 전해져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잠잠해지다가 녹색당이 2015년 전당대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차원의 연구조사를 제안하고, 페미니스트 정당과 해적당이 기본소득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소정당을 제외하고, 스웨덴의 주요 정당들은 기본소득을 정책의제화하지 않고 있다. 또 노조 또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Cigna, 2019).

그렇다면, 스웨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2016년에 실시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이하 ESS)의 결과를 보면, 스웨덴 국민들은 37.6%만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62.4%는 반대한다. 벨기에(58.62%), 이탈리아(58.58%), 핀란드(55.74%), 그리고 영국(50.83%) 등 기본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스웨덴

보다 기본소득 지지하는 비율이 한 순위 높은 독일도 지지하는 비율이 45.75%에 이른다. 유럽에서 스웨덴보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위스 뿐이었다(Fitzgerald, 2017). 한국의 기본소득 태도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보아도 스웨덴의 기본소득 지지비율은 한국보다도 낮게 나오고 있다(양재진·윤성원·장우윤, 2021; 남윤민, 2021).

왜 그럴까? 스웨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할까?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치면, 과연 얼마를 받고자 할까? 기본소득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어느 정도 지지가 떨어질까? 기본소득 때문에 증세를 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부담할 의사가 있을까? 기본소득의 찬반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기본소득 관련 증세에 대한 영향요인은 같을까? 스웨덴 국민들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증세에 갖는 다차원적인 생각과 태도형성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2021년 11월에 스웨덴 국민을 상대로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2027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이 논문에 담았다. 왜 스웨덴 정치에서 그리고 정책결정 영역에서 기본소득이 의제로 떠오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서베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스웨덴 국민들의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태도를 통해 시민사회 내의 수용성과 정치가들의 반응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2021년에 실시한 설문 응답 결과를 보면, 2016년의 ESS 결과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지지를 크게 앞섰다. 스웨덴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태도(45.7%)가 찬성하는 태도(17%)보다 많았다(중립, 37.3%).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세금이 인상되어야하고,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태도(68.1%)가 찬성하는 태도(9.2%)를 크게 앞질렀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도 반대(72.8%)가 찬성(27.2%)보다 훨씬 많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태도형성에는 정치이념과 세 부담 인식 그리고 사회보장 보호 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많은 스웨덴 국민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증세에 반대하지만,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찬성 경향이 컸고, 세 부담 인식을 크게 느낄수록 반대가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여길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떨어졌다

스웨덴 국민들도 진보성향일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하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보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가 상대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스웨덴 국민은 고수준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2019년, 총조세부담율은 GDP의 42.8%).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소요가 매우 큰 기본소득의 도입이 선거이슈나 정책의 제로 등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 절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찬반과 그 원인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설문결과를 제시하고 토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2.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기본소득의 찬반 논의와 태도 형성

기본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좌파 버전도 있고, 대상자를 저소득자에게 한정하는 우파버전도 있다.²⁾ 본고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좌파버전으로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위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이하 BIEN)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BIEN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혹은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현

2)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은 밀튼 프리드만이 제안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방식의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1962년 제안 당시, 4인 가족 기준으로 모든 저소득 가구에 소득이 연 \$3,600이 될 수 있게 보장하는 대신 공적부조(AFDC)나 식료품교환권(Food Stamp)과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빈자를 선별하고,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거대한 국가관료제를 없애 작은정부를 실현하고, 현금을 지급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게 하자는 게 골자였다(Moffitt, 2003).

금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³⁾ 기본소득이라면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household)가 아닌 개인(individual)에게 지급한다. 둘째, 노동시장 참여(근로)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지급한다. 셋째, 일정 금액을 주기적(Periodic,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넷째, 서비스나 물품 같은 현물(in-kind)이나 특정 서비스와 상품 구매만 가능한 바우처(voucher, 물품권)가 아닌 현금 급여(cash payment)를 지급한다. 다섯째, 자산조사(means-test)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universal)으로 지급한다.

위의 5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본소득을 급여 수준에 따라서, 모든 개인이 생계유지는 물론 사회·문화적 활동에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과 이 수준에 미달되는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으로 나누기도 한다(양재진, 2018).

현재 BIEN이 언급한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핀란드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은 전국민이 아닌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미국 알래스카의 석유배당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청년기본소득도 24세에 한정해서 지급한다. 게다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의 지역화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사례는 모두 기본소득이라 불리운다. 왜냐하면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지적대로, “[기본소득의] 결정적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나 자산, 생산 활동 가능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욕구(needs)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누어 준다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30).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현금 급여 중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수당,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그러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인구집단이기 때문이다.

3)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www.basicincome.org/basic-income).

기본소득과 달리 청년을 포함한 근로가능인구에게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 발생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복지급여는 없다. 적어도 학업이나 훈련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과 현금성 복지급여는 서로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급여와 기본소득은 원리가 다르다. 복지급여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욕구(needs)’ 발생 여부를 판정한 후 지급된다. 사회적 위험과 욕구 별로 노인(연금), 실직자(실업급여), 병자(건강보험), 출산 및 육아(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 양육(공보육, 아동수당), 저소득 혹은 빈곤(근로장려금-EITC 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이 지급된다(양재진, 2020).

그리고 이 복지급여의 크기 또한 동일하지 않다.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에 비례해 적정 수준을 보장해주려 한다. 생애평균소득이 높았던 은퇴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저소득자의 연금보다 높다. 암 걸린 사람이 받는 의료급여가 감기환자보다 크다. 기초선을 보장해주는 공적 부조는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와 다르다.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의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액수도 동일하다. 부자도 동일액을 주지만, 장애인이라고 더 배려하지 않는다. 실업자라고 또 가난하다고 더해 주는 것도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기존 사회보장의 강화보다는 i)로봇과 인공지능(AI)의 보편화로 인한 일자리 없는 사회의 도래와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적 노동의 증가, ii)공유부(Commonwealth)에 대한 시민의 권리가 언급되고 있다.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플랫폼 경제 등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변화가 대량 실업과 비전형 노동을 낳을 수밖에 없기에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 토지나 데이터 등은 특정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자연물이거나 공동 창조물인 공유부(Commonwealth)라고 본다. 이 공유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있으며, 그러하기에 공유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사회적 배당금(social dividend)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1/n로 똑같이 나누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Standing, 2011, Van der Veen and Paris, 1986; 금민, 2020: 186; 강남훈, 2019; 김수연, 2020).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 또한 분명하다. 먼저 반대론자들은 자동화로 인

한 기술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대한 우려는 새로운 게 아니라 산업화 및 기술 진보와 함께 늘 상존해왔던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기술 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 없게 만드는 대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다. 워드프로세서가 식자공을 대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워드프로세서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업무와 직업이 늘어나는 보완 효과도 발생한다.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연관 산업과 서비스업 쪽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생산 효과로도 동반된다. 단기적으로는 대체효과가 먼저 나타나 고용이 감소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완 효과와 생산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해 왔다.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다(허재준, 2018; Chui, Manyiki and Miremadi, 2015). 그리고 불안전 노동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소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존 복지의 원리 하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사회적 보호를 집중할 수 있게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오건호, 2020; 양재진, 2020).

또 공유부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꼭 $1/n$ 사회적 배당의 형태여야 하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석유배당을 실시하지만, 노르웨이는 북해유전의 석유 수입금을 $1/n$ 로 나누지 않고 국부펀드에 넣고 미래 연금 지출에 사용한다. 공유부가 낳은 수익금이라도 그 용처는 합의에 따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찬반 논리는 복지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 수용성이 달라질 것이다. 첫째, Melzer-Richard 모델에 입각해 볼 때,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Melzer and Richard, 1981; Vlandas, 2021). 또한 전국민을 상대로 소득상 실이나 필요성(needs)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급여에 비해 예산소요가 매우 커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소득수준 여부에 더해 본인의 주관적 세부담 인식도 기본소득의 찬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양재진 외, 2021). 둘째,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재분배와 평등을 성취나 자유보다 중시하는 진보적 이념의

소유자는 그렇지 않은 이념의 소유자보다 기본소득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Fernandez-Albertos and Kuo, 2018; 양재진·윤성원·장우윤, 2021). 셋째, 스웨덴처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크지 않고 급여의 적절성도 달성하고 있는 경우, 소득보장의 대체재 혹은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매력은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 등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가 이미 잘 되어 있다고 여기는 경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 기본소득 증세에 대한 일반적 태도

앞서 지적했듯이,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상대로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인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완전기본소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판 파레이스는 GDP의 25%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매월 약 77만 원짜리 기본소득이 가능하다(표 1). 이 경우, 2019년 현재 GDP의 28% 수준인 총조세부담율(사회보험료 포함)을 53%까지 높여야 한다. 만약 GDP의 10%만큼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총조세부담율은 38%가량이 된다. 2019년 OECD평균 총조세부담율 33%보다 5%p 정도 높은 수준이 된다.

<표 1> 기본소득 월 지급액 수준별 재정 소요

	GDP		예산 소요		인구		월 기본소득	
	한국 (10억 원)	스웨덴 (1억 크로나)	한국 (연/10억 원)	스웨덴 (연/1억 크로나)	한국 (만 명)	스웨덴 (만 명)	한국 (원)	스웨덴 (크로나)
GDP 25%			481,124.5	12,624			773,617	10,234 (약 128만원)
GDP 10%	1,924,498	50,496	192,449.8	5,049.6	5,183	1,028	309,447	4,094 (약 51만원)
GDP 5%			96,224.9	2,524.8			154,723	2,047 (약 25.6만원)

주: 2019년 기준. 1크로나=125원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2022)

스웨덴의 경우는 GDP의 25%를 기본소득화한다면, 2019년 현재 매월 1,0234 크로나(한화 약 128만원)짜리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 조세부담율을 현재 42.8%에서 67.8%까지 올려야 한다. 물론 기본소득 금액 이하의 현금성 복지급여를 통합한다면, 조세부담율은 다소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이 64%~80%에 이르는 스웨덴의 실업급여와 부모보험급여 그리고 연금 등에서 기본소득을 제하여도 상당한 수준의 현금복지 지출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의료와 사회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 총조세부담율은 60%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

기본소득론의 도입을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증세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세보다는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존의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보험과 같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더라도 실업이나 질병 등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보지 못한다. 즉, 개인이 세금 내는 것을 인지하고 계산해 낼 수 있지만, 미래 위험에 빠질지의 여부는 알 수 없기에 복지혜택은 유용적이고 예측 불가하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암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계하여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된다고 본다. 기본증세가 복지증세보다 정치적으로 용이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강남훈, 2019: 36). 여기에 토지와 데이터 등 공유부(common wealth)에 세금을 부과하고, 로봇세나 탄소세 등 새로운 대안적 세원을 발굴하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세율 상승을 최소화할 할 수 있다고 본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359). 한마디로, 조세부담은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부자들이 지고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로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을 것이기에(Francesc & Prady, 2018), 기본소득 증세에 다수 국민이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심리학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 예측하듯,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즉, loss aversion)이 있다(Kahneman & Tversky, 1979). 기본소득이 아무리 손익계산 상 이득이 된다 해도,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증세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도, 본인 자신

의 세금부담만큼은 최대한 회피하려고 한다. 증세에 동의하지만 보편증세보다는 부자증세를 선호하고,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위 넘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김교성·김윤민, 2016; 김사현, 2015).

또 어느 증세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증세에 대한 태도도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설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양재진 외, 2021). 증세 관련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지향성, 조세 공정성 인식,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학력, 자녀 유무, 그리고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민들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Stiers et al., 2021; Fernandez-Albertos & Kuo, 2018; Edlund, 2003; Svallfors, 2011; 남윤민, 2018; Jimenez & Lyer, 2016; Svallfors, 2013; Rothstein, Smanni & Teorell, 2012; 양종민, 2020). 이념적으로 보수(우파)보다는 진보(좌파)에서 기본소득 증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을 것이 예상되고, 세부담 인식이 높을수록 반대가 많을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본소득 증세에 보다 더 순응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국민은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다음 절에서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데이터와 변수

3.1 설문조사 데이터

본 연구는 연구진이 스웨덴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Norstat에 의뢰하여 2021년 11월에 실시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증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스웨덴의 18세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인구비례할당하여 표집한 2,0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기본소득 액수,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금 납부액에 관한 질문에 실험 설계를 구성하였다(Gaines, Kuklinski, and

Quirk, 2007). 기본소득 액수에는 기본소득 제공에 필요한 연간 예산 소요액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금 납부액은 기본소득 액수의 변화를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실험 설계에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응답자는 각 집단의 인구통계적 유사성을 위해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설문조사 데이터는 지역, 성, 연령 등 인구통계 변수에서 조사표본과 모집단의 특성이 동일하게 되도록 림가중(rim weighting)을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3.2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 “그 동안 받았던 복지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 “세금을 더 내고, 그 동안 받았던 복지혜택이 축소되더라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와 같은 4개의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는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가 전제된 기본소득 도입, 복지 축소가 전제된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증세와 복지 축소가 모두 전제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태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논의하였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 태도는 우선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일반적인 질문과 증세 대상을 ‘고소득층’, ‘중산층 이상’,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제시하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증세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는 “매우 반대”부터 “매우 찬성”까지 4점 혹은 5점 척도의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그리고 증세 태도에 미치는 설명변수는 크게 사회·정치적 특성, 경제적 이해,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정치적 특성은 개인의 이념성향과 정부에 대한 신뢰이며 경제적 이해는 소득상실 대비 정도, 가구소득, 가구부동산 자산액, 취업 여부,

세부담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 유무, 학력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명변수의 측정은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변수	변수 명	측정	
종속 변수	기본소득도입	(1)매우 반대~(5)매우 찬성	
	세금 더 내고 기본소득도입	(1)매우 반대~(5)매우 찬성	
	복지 축소되고 기본소득도입	(1)매우 반대~(5)매우 찬성	
	세금 더 내고 복지 축소되고 기본소득도입	(1)매우 반대~(5)매우 찬성	
	기본소득 증세	(1)매우 반대~(4)매우 찬성	
	고소득층 증세	(1)매우 반대~(5)매우 찬성	
	중산층 이상 증세	(1)매우 반대~(5)매우 찬성	
	모든 사회구성원 증세	(1)매우 반대~(5)매우 찬성	
설명 변수	사회·정치적 특성	이념성향	(1)보수, (2)중도, (3)진보
		정부 신뢰	(1)신뢰하지 않는다, (2)보통이다, (3)매우 신뢰한다
	경제적 이해	소득상실 대비 정도	(1)전혀 준비되지 않음~ (5)매우 준비되어 있음
		가구소득	(1)소득 없음~(12)20만 크로나 이상
		부동산 자산	(1)1백만 크로나 이하~ (6)1천만 크로나 이상
		취업 여부	(0)취업상태 아님, (1)취업상태
		세 부담 인식	(1)매우 낮다~(5) 매우 높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1)18~29세~(5)60대 이상
		혼인 유무	(0)미혼, (1)기혼
		학력	(1)초등학교~(6)대학원 이상

3.3 실험설계변수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실험 설계를 통해 기본소득 액수와 기본소득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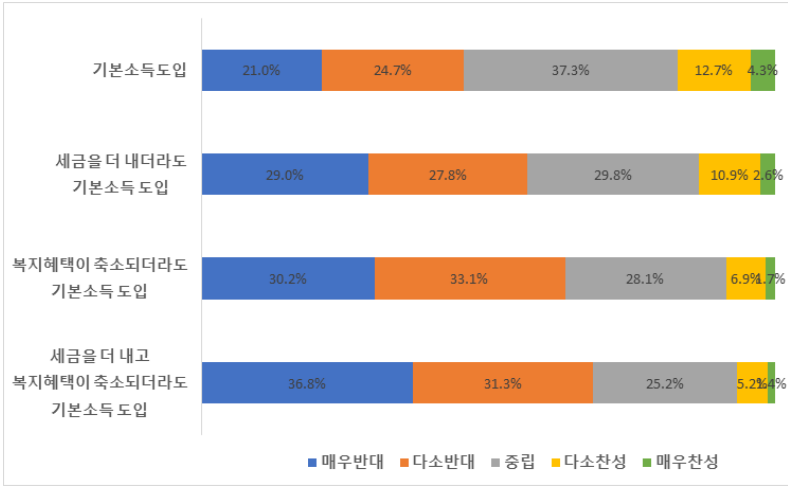
입을 위한 세금 납부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소득 액수에 대한 실험설계는 희망하는 기본소득 액수를 매달 300 크로나, 500 크로나, 1,000 크로나, 2,000 크로나, 3,000 크로나, 5,000 크로나, 10,000 크로나, 그리고 20,000 크로나로 설정하고 예산 소요액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즉 통제집단에는 예산 소요액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희망하는 기본소득 액수를 조사하였지만, 실험집단은 희망하는 기본소득을 조사할 때 이에 필요한 국가 예산액을 제시해 주었다.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의 사액은 기본소득 액수를 실험 자극으로 제시하여 기본소득 액수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는 세금액의 증감을 조사하였다. 통제집단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에 제시한 기본소득 액수는 월 300 크로나, 3,000 크로나, 그리고 5,000 크로나였다.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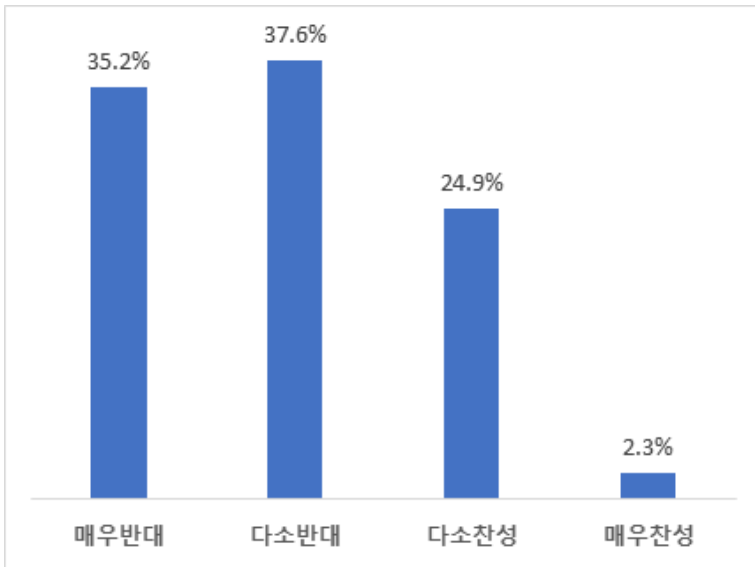
4.1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림 1>과 같이 스웨덴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태도(45.7%)가 찬성하는 태도(17%)보다 더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거나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태도는 각각 56.8%와 63.3%로 더 높아졌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조건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동시에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면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태도(68.1%)가 찬성하는 태도(9.2%)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도 <그림 2>와 같이 반대(72.8%)가 찬성(27.2%) 보다 훨씬 많았다.

<그림 1>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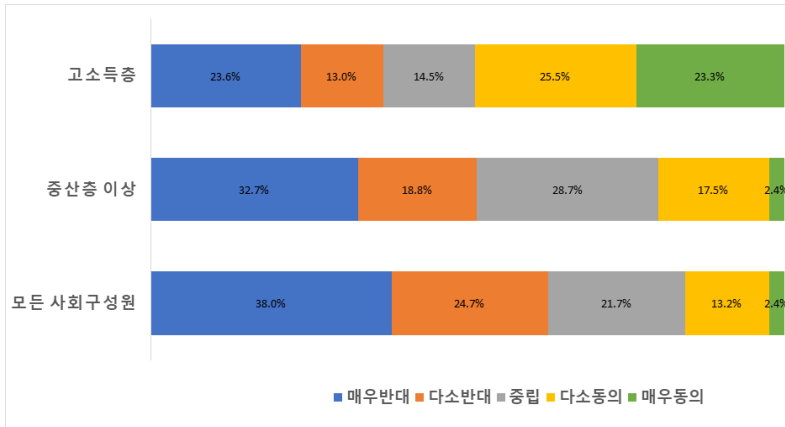


<그림 2> 기본소득 증세 태도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 자체에 부정적인 비율이 높기도 했지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대상에서도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증세보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증세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림 3>과 같이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찬성은 겨우 15.6%였고 반대가 62.7%였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대한 찬성도 19.9%에 불과하였다. 반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찬성이 48.8%에 달하였고 반대는 36.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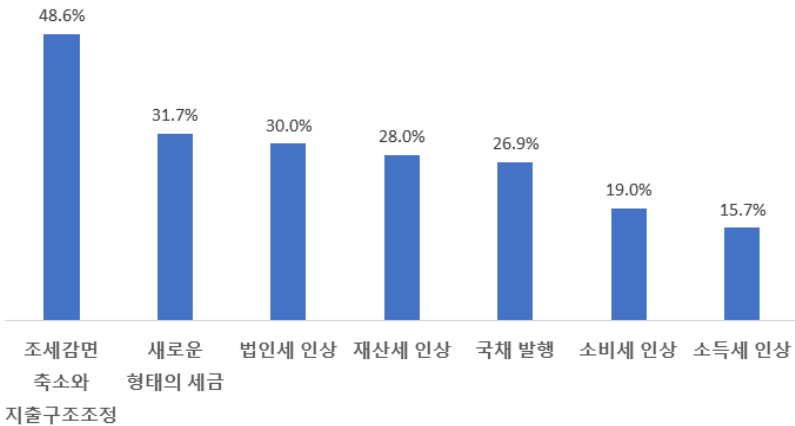
<그림 3> 증세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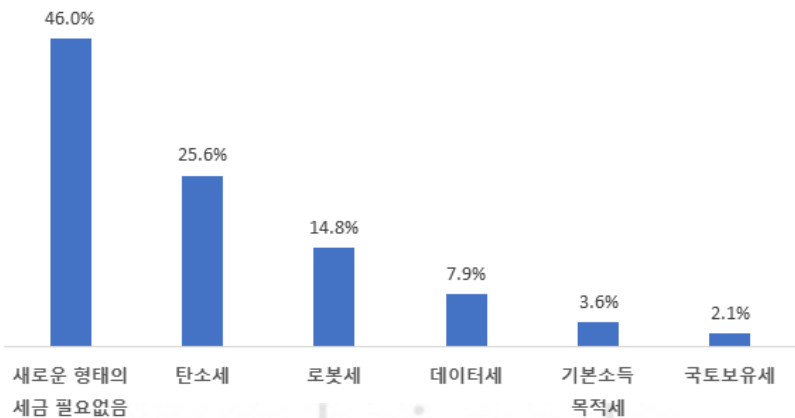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선호하는 증세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조세감면 축소와 지출구조조정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기본소득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세금 신설(31.7%)이었다. 복지확대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증세를 하기보다 기존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여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기존의 세금을 늘리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을 선호하였다. 기존 세금에서는 법인세 인상, 재산세 인상, 국채발행, 소비세 인상, 소득세 인상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방법 선호와 같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는 모든 계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소비세와 소득세 인상보다 법인세와 재산세와 같이 자산

가에 부담을 주는 증세를 선호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누프현상, 즉 내 주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세금을 떼어가길 바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신설 세금 선호도에서는 <그림 5>와 같이 탄소세(25.6%), 로봇세(14.8%), 데이터세(7.9%) 등 순으로 나타났지만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 필요 없다는 의견(46%)이 가장 많았다.

<그림 4> 기본소득 증세 방법(1+2 순위)



<그림 5>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신설 세금 선호



4.2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 증세 태도에 관한 회귀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는 전체적으로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증세가 이루어지거나 기존의 복지혜택이 축소가 된다면 기본소득 도입의 반대는 더 커지고 있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에만 찬성하고 있었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중산층 이상 혹은 모든 사회구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았지만, 누가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찬성하고 있는가? 본 절에서는 스웨덴의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 증세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4점 혹은 5점 척도의 서열변수이므로 분석 방법은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표 3>의 결과와 같이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이념성향과 세 부담 인식이었다. 이념성향은 모든 기본소득 태도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스웨덴의 다수가 기본소득을 반대하지만, 스웨덴에서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세금을 더 내거나 복지혜택이 축소되거나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이 축소된다는 조건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세 부담 인식은 모든 기본소득 태도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증세와 복지 축소 등의 모든 조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았다. 스웨덴에서 대다수가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것은 기본소득에 따른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염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질병, 실업,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대비 정도도 기본소

득 도입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여길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기본소득 도입에 증세의 조건이 주어지거나 증세와 복지혜택 축소가 모두 전제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과 학력도 기본소득 도입 태도와 일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조건이 없는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 도입	세금 더 내고 기본소득 도입	복지 축소되고 기본소득 도입	세금 더 내고 복지 축소되고 기본소득 도입
이념성향	0.615*** (9.05)	0.695*** (10.05)	0.410*** (6.08)	0.496*** (7.15)
정부 신뢰	-0.0383 (-0.56)	-0.0276 (-0.40)	0.011 (0.16)	0.0856 (1.22)
소득상실 대비 정도	-0.232*** (-5.10)	-0.245*** (-5.30)	-0.0847 (-1.88)	-0.149** (-3.21)
가구소득	-0.0681 (-1.45)	-0.0188 (-0.41)	0.0011 (0.02)	0.0347 (0.73)
부동산 자산	-0.0557 (-1.59)	-0.0265 (-0.76)	-0.0333 (-0.96)	-0.0147 (-0.42)
취업 여부(0=미취업)	0.0046 (0.04)	-0.096 (-0.75)	0.062 (0.49)	-0.016 (-0.12)
세 부담 인식	-0.228** (-3.27)	-0.561*** (-7.81)	-0.161* (-2.33)	-0.364*** (-5.13)
성별(0=여성)	-0.156 (-1.60)	-0.154 (-1.56)	-0.139 (-1.43)	-0.191 (-1.92)
연령	-0.0075* (-2.19)	-0.0033 (-0.97)	0.001 (0.29)	0.002 (0.53)

	기본소득 도입	세금 더 내고 기본소득 도입	복지 축소되고 기본소득 도입	세금 더 내고 복지 축소되고 기본소득 도입
혼인 유무(0=미혼)	0.0386 (0.32)	-0.0131 (-0.11)	-0.101 (-0.82)	-0.001 (-0.01)
학력	-0.0254 (-0.77)	-0.0336 (-1.01)	-0.0439 (-1.33)	-0.082* (-2.45)
가구원수 제공근4)	-0.0029 (-0.34)	-0.0026 (-0.30)	0.0011 (0.13)	-0.0095 (-1.07)
N	1482	1482	1482	1482
Pseudo R ²	0.060	0.092	0.026	0.055
BIC	4144.2	3914.3	3985.7	3741.6

* p< .05, ** p< .01, *** p< .001,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상수 계수는 표의 공간 문제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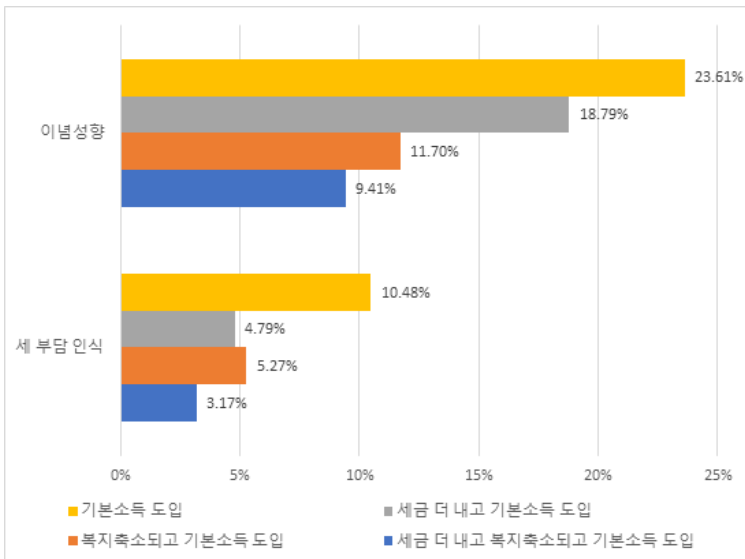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이념성향과 세 부담 인식이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계수만 가지고는 조건별 이념성향과 세 부담 인식의 크기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림 6>은 이념성향이 진보적일 경우 혹은 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인식할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확률을 비교한 것이다.5) 진보적 이념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할 확률은 23.61%였지만 증세가 전제된 기본소득 도입이라면 찬성할 확률은 18.79%로 하락하였다. 복지혜택의 축소가 전제될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할 확률은 11.7%였다. 즉,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증세보다 복지혜택 축소가 더 민감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념성향이 진보적이라도 증세와 복지혜택 축소가 모두 전제될 경우 기본소득에 찬성할 확률은 9.41%에 불과하였다. 스웨덴에서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지

- 4) 백만 크로나 단위 구간으로 측정된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균등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제공근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 5) 찬성과 매우 찬성의 확률이며 찬성할 확률의 계산과정에서 나머지 변수는 평균값으로 가정하였다.

만,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할 확률은 23.61%로 높다고 할 수 없었다. 더욱이 기본소득 도입으로 증세나 복지혜택의 축소가 이뤄진다면 진보적 이념이라도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 확률이 9.41%까지 매우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세 부담이 가장 크다고 느껴질 경우 기본소득 도입을 찬성할 확률은 10.48%에 불과하였다. 증세가 전제된 경우와 복지혜택 축소가 전제된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확률은 각각 4.79%와 5.27%로 낮아졌다. 세 부담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 결정에는 복지혜택의 축소보다 증세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부담이 높다면 증세와 복지혜택 축소가 모두 전제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확률이 겨우 3.17%에 불과하였다.

<그림 6> 이념성향과 세 부담 인식이 기본소득 도입 태도에 미치는 영향



Note: 전체 응답자의 기본소득 찬성 확률은 조건 없는 도입은 14.48%, 세금 더 내는 조건은 10.38%, 복지 축소되고 조건은 8.28%, 세금 더 내고 복지 축소되는 조건은 6%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 태도를 분석한 <표 4>의 결과를 보면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증세 태도에 유의미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념성향과 세 부담 인식이었다.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비율(27.2%)보다 반대하는 비율(72.8%)이 훨씬 높았다. 비록 기본소득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은 낮았지만, 진보적 이념성향은 기본소득 증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대상이 고소득층이거나 중산층 이상 혹은 모든 사회구성원일지라도 진보적 이념성향 응답자의 기본소득 증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변함이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높다고 느낄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증세 대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스웨덴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증세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증세의 부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상실 위험에의 대비 정도도 기본소득 증세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소득상실 위험에 잘 대비되어 있다고 여길수록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기본소득 증세의 대상이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으로 한정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기본소득 증세 대상이 모든 사회구성원으로 확대될 경우 소득상실 대비 정도는 기본소득 증세 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소득상실 위험에 비교적 대비가 잘되어 있는 고소득층 혹은 중산층 이상이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증세가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본소득 증세에 반대하는 태도가 약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소득과 부동산 자산 그리고 취업 여부는 기본소득 증세 태도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 대상이 고소득층으로 한정된 문항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기본소득 증세를 반대하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는 기본소득 증세 태도와 양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증세의 대상으로 할 때 뿐이었다. 연령은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를 고소득층으로만 한정할 경우 유의미하게 증세를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소득 증세 태도

	기본소득 증세	기본소득 고소득층 증세	기본소득 중산층 이상 증세	기본소득 모든 사회구성원 증세
이념성향	0.677*** (9.45)	0.849*** (12.26)	0.746*** (10.71)	0.219** (3.22)
정부 신뢰	0.0837 (1.15)	0.0337 (0.49)	0.138 (1.96)	0.272*** (3.92)
소득상실 대비 정도	-0.140** (-2.94)	-0.221*** (-4.88)	-0.157*** (-3.40)	-0.0698 (-1.52)
가구소득	0.0083 (0.18)	-0.0777 (-1.64)	0.0153 (0.32)	-0.0082 (-0.18)
부동산 자산	-0.0388 (-1.06)	-0.0878* (-2.54)	-0.0649 (-1.82)	-0.0284 (-0.81)
취업 여부 (0=미취업)	-0.195 (-1.45)	0.0915 (0.71)	-0.256 (-1.96)	-0.0592 (-0.46)
세 부담 인식	-0.793*** (-10.50)	-0.479*** (-6.76)	-0.717*** (-9.85)	-0.715*** (-9.96)
성별(0=여성)	-0.0736 (-0.71)	-0.079 (-0.81)	0.0231 (0.23)	-0.035 (-0.35)
연령	-0.0061 (-1.70)	0.009** (2.63)	0.0015 (0.42)	0.0026 (0.76)
혼인 유무 (0=미혼)	-0.002 (-0.02)	-0.078 (-0.64)	0.021 (0.16)	0.016 (0.12)
학력	0.0074 (0.21)	-0.0561 (-1.71)	-0.0638 (-1.90)	-0.0343 (-1.03)
가구원수 제공근 ⁶⁾	0.0008 (0.09)	0.0017 (0.20)	-0.0097 (-1.11)	0.0095 (1.11)
N	1482	1482	1482	1482
Pseudo R ²	0.134	0.103	0.120	0.069
BIC	3136.7	4294.3	3880.5	4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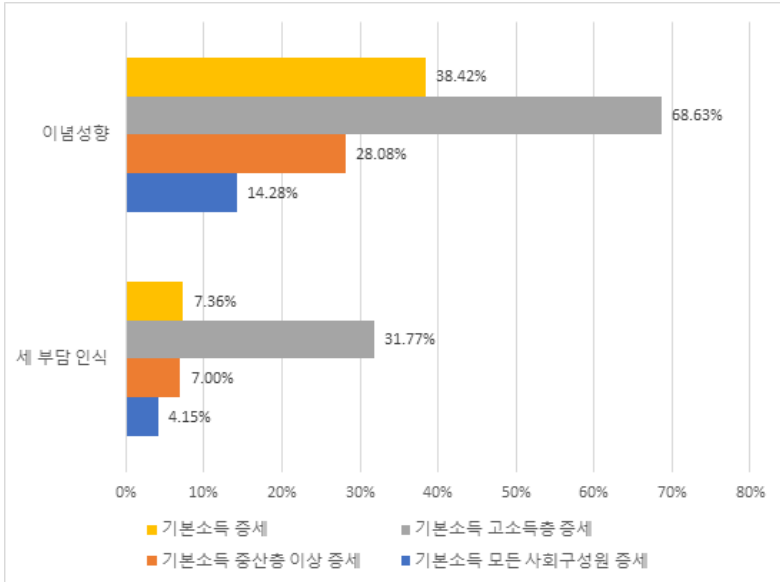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상수 계수는 표의 공간 문제로 생략

기본소득 증세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이념성향과 세 부담 인식에 대한 추가 분석으로 <그림 7>은 진보적인 이념성향과 높은 세 부담 인식이 증세의 방향에 따라 기본소득 증세에 찬성할 확률을 비교한 것이다.⁷⁾ 진보적 이념의 경우, 기본소득 증세에 찬성할 확률은 38.42%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의 대상을 고소득층으로 한정할 경우 기본소득 증세에 찬성할 확률은 68.63%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본소득 증세의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증세에 찬성할 확률은 28.08%로 증세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증세보다 찬성할 확률이 낮게 나왔다. 이념성향이 진보적일 경우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증세에 찬성할 확률은 겨우 14.28%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즉 스웨덴에서 진보적 이념성향은 기본소득 증세에 찬성하는 태도를 가져오지만, 보편적 증세가 아닌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를 선호하고 있었다.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기본소득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높은 세 부담 인식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찬성할 확률은 겨우 7.36%에 불과했다. 기본소득 증세 대상이 중산층 이상이거나 모든 사회구성원일 경우 증세에 찬성할 확률은 각각 7%와 4.15%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증세 대상이 고소득층일 경우에는 세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더라도 증세에 찬성할 확률이 31.77%로 높아졌다. 세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더라도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에는 찬성하는 뉘프현상이 나타났다.

-
- 6) 백만 크로나 단위 구간으로 측정한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균등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제곱근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 7) 찬성과 매우 찬성의 확률이며 찬성할 확률의 계산과정에서 나머지 변수는 평균값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7> 이념성향과 세 부담 인식이 기본소득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



Note: 전체 응답자의 증세 찬성 확률은 조건이 없는 경우 37.36%, 증세 대상이 고소득층일 경우 47.73%, 증세 대상이 중산층 이상일 경우 15.84%, 모든 사회구성원이 증세 대상일 경우 13.8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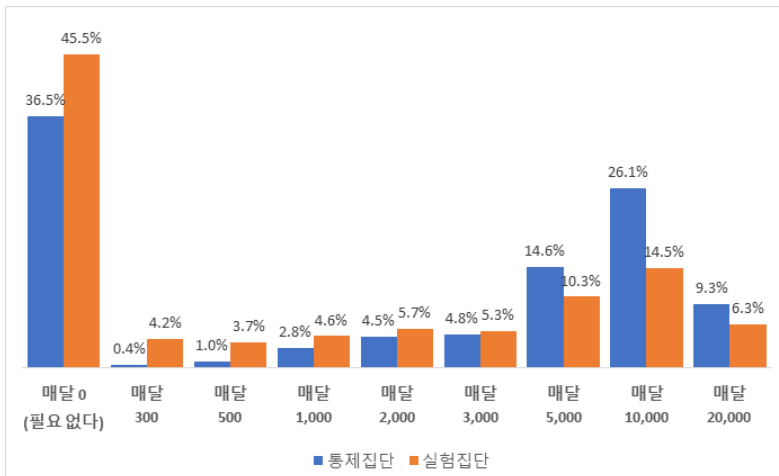
4.3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한 실험설계 분석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는 기본소득 액수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세금 납부액에 대한 실험설계를 진행하였다. 실험자극(예산 소요액)은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주었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도 무작위로 나눠 두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최소화하였다(Moore, 2012). 기본소득 희망 액수에 대한 실험설계는 기본소득 액수를 매달 300 크로나, 500 크로나, 1,000 크로나, 2,000 크로나, 3,000 크로나, 5,000 크로나, 10,000 크로나, 그리고 20,000 크로나로 제시하고, 해당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연간 예산액을 함께 제시하였다. 통제집단에게는 기본소득 액수만 제시하고 실험자

극(예산 소요액)은 주지 않았다. 통제집단에서 희망하는 기본소득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액수는 <그림 8>과 같이 매달 0 크로나(기본소득 필요 없다)(36.5%)를 제외하면, 매달 10,000 크로나(한화 약 125만원, 26.1%)였으며 그 다음으로 매달 5,000 크로나(14.6%)와 매달 20,000 크로나(9.3%) 순이었다.

희망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연간 예산액을 제시한 실험집단에서도 희망 기본소득액 순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0 크로나(기본소득 필요 없다)의 비율은 45.5%로 훨씬 높아졌으며 매달 10,000 크로나를 기본소득으로 희망하는 비율은 14.5%로 크게 낮아졌다. 기본소득으로 매달 5,000 크로나와 매달 20,000 크로나를 희망하는 비율도 각각 10.3%와 6.3%로 낮았다. 반면 기본소득으로 매달 3,000 크로나 이하를 희망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특히 매달 300 크로나와 500 크로나 등 제시된 기본소득에서 가장 낮은 액수를 희망한 비율은 각각 0.4%에서 4.2%, 1%에서 3.7%로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실험 자극으로 제시하면 스웨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원하지 않거나 희망하는 기본소득액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희망 기본소득액 분포(기본소득 단위; 크로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액에 대한 실험설계는 앞서 조사에서 기본소득 증세를 지지하는 응답자에 한정해 시행했다. 실험설계는 수령할 기본소득 액수가 얼마일지를 제시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기본소득 액수를 300 크로나, 3,000 크로나, 그리고 5,000 크로나로 제시한 실험집단 간의 비교였다. <표 5>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간 평균 추가 세금 납부 의사액을 분산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액수는 기본소득으로 받는 액수보다 크게 낮았다. 월 300크로나를 지급하는 실험자극에는 평균적으로 연 1,625크로나를 세금으로 추가 납부하겠다고 하고, 월 3,000크로나 기본소득에는 연 4,751 크로나, 월 5,000크로나 기본소득에는 연 8,423 크로나를 세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세금납부 희망액을 조사한 것임을 감안하면, 반대자까지 포함한 전체 국민의 세금추가 납부 의사액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기본소득의 액수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세액이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에서 기본소득 액수가 많아질수록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세금 액수는 늘어났다. 하지만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추가 세금납부 의사액은 전체적으로 낮았다. 특히 통제집단(연 9,280 크로나 추가 세금납부)에 비해 기본소득 월 300크로나가 제시되면 실험집단은 연 1,625 크로나를 추가 납부할 의사를 보였고, 기본소득으로 월 3,000 크로나가 제시된 경우에는 연 4,752 크로나를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에서 세금 납부액이 더 높은 것은, <그림 8>에 나타나듯이 받고자 하는 희망 기본소득 액수가 실험자극으로 제시된 액수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5>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기본소득 증세에
대한 추가 세금 납부 의사액 분산분석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집단군(Scheffe)		
				1	2	3
전체	통제집단	9280.5 (25375.65)	9.827*** (0.000)			9280.5
	실험1	1625.29 (7235.24)		1625.29		
	실험2	4751.79 (11725.24)		4751.79	4751.79	
	실험3	8423.31 (18535.3)			8423.31	8423.31

* p< .05, ** p< .01, *** p< .001, 단위: 크로나(평균)

주: 집단군(Scheffe)은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통제집단(기본소득액 미제시); 실험집단1(300크로나); 실험집단2(3,000크로나); 실험집단3(5,000크로나)

5. 결론

스웨덴 국민들의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소득 희망 수령액수와 기본소득 증세 관련해서 단순하게 찬성 vs. 반대의 태도만을 살펴보지 않았다. 희망 기본소득 수령액을 조사할 때는 소요 예산액을 제시한다던가, 추가 납부세액 조사에서는 기본소득 액수를 점차 증액하여 제시하는 등 실험자극을 가하여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보다 크게 많았다. 기본소득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대가 더 커졌다. 기본소득 증세의 경우, 기업과 부자를 통해 이루는 것을 선호하였다. 세금 인상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증세가 되더라도 자신의 부담은 피하고자 하는 늪프(NOOMP) 현상이 확인되었다. 기본소득의 “받는” 액수가 늘어나면, 추가 납부 의사 세액도 증가했다. 하지만, 기본소득 수령 예상액의 13%~45% 수준의 세금만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에게만 납부세액을 파악한 것이기에, 반대자가 포함된 전체 평균은 더 하향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반대가 지지보다 많았지만, 그 정도는 이념성향과 세부담 인식, 그리고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해 보수나 중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지적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세부담 인식이 클수록, 기본소득과 관련 증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크게 높아졌다. 소득상실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높아졌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적 욕구(needs)에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적 효과 측면에서 매우 재정비효율적이다. 기본소득이 스웨덴을 포함해 대부분의 많은 복지국가에서 정책대안으로 고려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게다가 스웨덴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수준의 복지를 이루기 위해 이미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재정소요가 큰 기본소득의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소득 및 관련 증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주요 정당에서 기본소득을 선거이슈나 정책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에서도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소득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진보주의자 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에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보 정당이 진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를 주도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핀란드 우파정부의 실험에서처럼, 전국민 기본소득이 아닌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차원에서 부분 기본소득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기술실업이 실제로 만연하여 전국민 대상 실업수당 지급이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은 한, 스웨덴에서 기본소득이 주요한 정책의제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장남훈(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고양: 박종철출판사.
- 금민(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서울: 동아시아.
- 김중예·김현섭(2017).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1-29.
- 김교성·김윤민(2016). 복지태도의 이중성: ‘눔프’현상과 집단별 차이. 『한국사회복지학』, 68(2), 27-51.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7). 『기본소득이 온다』.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사현(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 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1), 27-57.
- 김수연(2020. 8. 11).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 ... ‘공유 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017053939598> 에서 인출.
- 남윤민(2018). 한국의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동일한 태도와 상반된 태도 결정요인. 『담론 201』, 21(2), 7-37.
- 남윤민(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복지정치: 복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2), 177-204.
- 문재용·최예빈(2021). 선심쓰듯 재난지원금 내놓더니... 여당, 결국 증세 나선다. 매경경제. 2021.2.23.
- 백승호(2020).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본소득 담론회 발표문.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안현효(2021).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MMT 논쟁. (나원준 외)』. 과천: 진인진.
- 양재진(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45-70.
- 양재진(2020).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서울: 한겨레출판.

- 양재진 · 윤성원 · 장우윤(2021).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10(2), 1-28.
- 양종민(2020).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 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79-112.
- 오건호(2020). 『미래 근로 연령층 소득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소득기반 재구조화. 일의 미래와 대응: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남재욱 · 석재은 · 양재진 · 오건호 · 허재준, 2020)』.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유종성(2020).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보장 개혁의 방향. 『동향과 전망』, 110, 60-113.
- 이노우에 도모히로(2020). 『기본소득의 정치학. (송주명 · 강남훈 · 안현효 역)』. 과천: 진인진.
- 이원재 · 윤형중 · 이상민 · 이승주(2019). 『국민기본소득제. LAB2050 솔루션 리포트』, 2050-04.
- 최한수(2020. 6. 16).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박주민 의원실 주최 “Post-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토론회 발제문.
- 허재준(2018. 2. 5).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국회4차산업혁명특위 공청회.
- Abe, E., Yang, J., & Faricy, C. (2020). The electoral bases of small tax states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in Jae-jin Yang (ed.)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Cheltenham, UK: Edward Elgar.
- Chui, M., Manyika, J., & Miremadi, M. (2015). Fourth fundamentals of workplace automation. *Mackinsey Quarterly*, November.
- Cigna, L. (2019). *Looking for a North Star? Trade Union's Positions in the Universal Basic Income Debate* (Masters dissertation). SciencesPo School of Public Affairs.
- Daniel, K.,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 under Risk. *Econometrica*, 47(2), 263-292.
- Edlund, J. (2003). Attitudes towards Taxation: Ignorant and Incoherent?.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26, 145-167.
- Fernández-Albertos, J., & Kuo, A. (2018). Income Perception, Information, and Progressive Tax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6, 83-110.
- Fitzgerald, R. (2017). *Survey reveals young people more likely to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but it's not a left-right thing*. World Government Summit.
- Gaines, Brian J., Kuklinski, J. H., & Quirk, P. J. (2007). The Logic of the Survey Experiment Reexamined. *Political Analysis*, 15(1), 1-20.
- Karakas, C. (2016). *Basic income: Arguments, evidence, prospect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Maura, F., & Prady, D. (2018). Universal Basic Income: Debate and Impact Assessment. *IMF Working Paper* (WP/18/273).
- Moffitt, R. (2003). The Negative Income Tax and the Evolution of U.S. Welfare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3), 119-140.
- Moore, R. T. (2012). Multivariate Continuous Blocking to Improve Political Science Experiments. *Political Analysis*, 20(4), 460-479.
- OECD Statistics. (2018). <https://doi.org/10.1787/data-00900-en>
- OECD Better Life Index. (2020).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 Peggy, J., & Lyer, G. S. (2016). Tax compliance in a social setting: The influence of social norms,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fairness on taxpayer compliance. *Advances in Accounting*, 34, 17-26.
- Rothstein, B., Samanni, M., & Teorell, J. (2012). Explaining the welfare state: Power resources vs. the Quality of Government.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1), 1-28.
- Samuel, S. (2020). Everywhere basic income has been tried, in one map.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20/2/19/21112570/universal-basic-in>

come-ubi-map

- Stiers, D., Hooghe, M., Goubin, S., & Lewis-Beck, M. S. (2021). Support for progressive taxation: self-interest (rightly understood), ideology, and political sophisticat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16.
- Svallfors, S. (2011). A Bedrock of Support? Trends in Welfare State Attitudes in Sweden, 1981-2010.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7), 806-825.
- Svallfors, S. (2013). Government quality, egalitarianism, and attitudes to taxes and social spending: A European comparis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 363-380.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21세기 기본소득. (홍기빈 역, 2018)』. 서울: 흐름출판.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 Van der Veen, R. & Van Parijs, P. (198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Basic Income Studie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Basic Income Research*. 1(3).
- Zamboni, M. (2021). Basic income in the Swedish legislative debate: The forbidden topic.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23(4), 341-359.

<Abstract>

People's Attitude Toward Universal Basic Income and Tax Increase in Sweden

Yang, Jae-jin*

Nam, Yun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Swedish people's attitude toward universal basic income(UBI) and related tax increase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Overall,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expressed opposi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UBI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expressed support. Also, a negative attitude toward tax increases and the NOOMP(Not Out of My Pocket) phenomenon were identified. Opposition to the related tax increases was greater than those in favor. When the introduction of a UBI was accompanied by tax increase, opposition grew even greater. In the case of tax increase for the UBI, they preferred to achieve it through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on the rich.

In general, opposition against the UBI and related tax increases was higher than support. But the degree varied depending on ideological tendencies, perceptions of tax burden, and preparedness for income loss. The more progressive, the more supportive of basic income and related tax increases. Conversely, the greater the perception of tax burden, the higher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UBI and related tax increases. The greater the preparedness for income loss, the higher the opposition to basic income.

Basic income provides cash indiscriminately regardless of social welfare

* Yonsei University (First Author)

**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needs. In terms of social welfare effects, it is very inefficient. This may be the reason why basic income is not considered as a policy alternative in most welfare countries, including Sweden. Moreover, public trust in Sweden's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is higher than in any other country.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support for the UBI is significantly low in Sweden. Moreover, the fact that Swedish people are already paying high taxes to achieve a high level of social protection seems to reinforce the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introduction of the UBI because it requires unbearable tax increase.

Key Words: Sweden, Basic Income, Tax Increase, Social Security, Welfare State

성명: 양재진(Yang, Jae-jin)
소속: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E-mail: jjyang@yonsei.ac.kr

성명: 남윤민(Nam, Yunmin)
소속: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E-mail: yunmin.nam@kongju.ac.kr

논문 접수일: 2022.06.02.

논문심사 완료일: 2022.06.22.

수정원고 접수일: 2022.06.25.

게재 확정일: 2022.06.27.

